



주간통일정세 2014-26(2014.06.30~07.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2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전술로켓 발사 훈련"...김정은 직접 지도(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군의 전술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며 감시소 정점에 올라 훈련 보고를 받고 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리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 소리와 함께 탄도로켓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묘사하며, "발사 훈련을 통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술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남김없이 검증됐으며 주체적인 로켓 사격 방법이 완성되게 됐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동해안 섬 초소 시찰..."난공불락 요새 만들라"(7/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의 섬 초소인 화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방어대를 찾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화도방어대는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의 방어 전역에서 전초기지이며 당중앙의 트랙(뜯)과 잇닿아있는 동해관문의 전초선"이라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감시소에 올라 군부대의 섬 방어계획을 검토하며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영해에 기어드는 원수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김푸른 바닷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동서해함대 지휘관 수영 훈련 참관(7/2, 조선중앙통신)**
 - 6월 말부터 연일 군 시찰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 지휘관들의 수영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 판정훈련을 지도했다"라며 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해군 지휘관들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지휘성원들로 준비시키고 해군부대 안에 수영훈련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힘.

- **北 신문, 김일성 20주기 앞두고 "김정은 받들자" 촉구(7/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상·김정일)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주장함.

- **北 김정은, 軍도서상륙훈련 참관…"NLL해역 위협받아"(7/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육해공 군인들과 각종 구경의 포, 잠수함 등 군함,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 편대의 섬 상륙훈련을 지켜보고 "얼마 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음을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이어 "(나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고 단단히 버르고 있다"며 "원수들이 열점수역(NLL 지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 **北신문 "발사체 발사는 자주권 행사" 거듭 주장(7/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자위적 조치를 시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판한 데 대해 "우리의 혁명무력이 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은 우리의 영해에서 벌어진 정상적인 것으로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권리 행사"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위협과 도발의 원흉"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로켓 발사를 걸고들며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데는 지역 정세 악화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들씌우고 그 뒤에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흥계가 숨어 있다"고 비난함.
- **北, 김일성의 '조선총련 사랑' 새삼 부각(7/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주석이 1971년부터 북한과 일본을 오간 만경봉호의 건조 당시 배의 설계부터 식당 메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며 "아버이 수령님의 이토록 뜨겁고 다심한 손길에 의해 만경봉호는 첫 출항 후부터 수 십 년 간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조국 왕래를 보장하는 사랑의 뱃길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강조함.

■ 김정은 동향

- 6/30,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켓 발사훈련 지도(6.30, 중앙통신 중앙방송)
- 7/1,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2중3대혁명붉은기 화도방어대 시찰 및 군인들 가족들과 기념 촬영(7.1, 중앙통신 중앙방송)
- 7/2,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 능력 판정 훈련을 지도(7.2, 중앙통신 중앙방송)
- 7/6,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 송도원야영소 시찰(7.6, 중앙통신)



■ 기타(대내 정치)

- 김일성 김정일 영도 업적(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지위, 강성국가 건설의 새 시대 등) 칭송 및 '김정은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쉰민의 '김정은에 충성' 강조(7.2, 중앙통신·노동신문)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차수), 7월 2일 럽철성(육군 중장) 등 배석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 주요 지휘성원·배우들 면담 및 '김정은의 축하 인사' 등 전달(7.3,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소년 학생들의 회고음악회, 7월 4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전용남(청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7.4, 중앙통신)
-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회고모임, 7월 4일 최룡해(당중앙위 비서)·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7.4, 중앙통신)
- 김일성 사망 20돌 즈음 '인민무력부 위대성 발표회', 7월 6일 진행(7.6, 중앙통신)
-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 함경남도 여러 단위들에서 진행(7.6, 중앙통신)

나. 경제

- "北, 일본기업 북한 진출 요구"(7/1, 마이니치신문)
 - 1일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그간 진행된 북일 협의에서 양측의 인적 왕래를 막는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일본에 요구하며 '북일 간의 인적 교류를 진전시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함.
- "돈세탁 위험국' 北,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 논의"(7/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을 '돈세탁 위험국가'로 지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FATF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돈세탁 위험국가'로 재지정된 지난 2월부터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FATF와 직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美 대북제재법 시행 예산 5년간 100억원 추산"(7/1,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4 HR 1771)' 시행을 위해 5년간 약 1천만 달러(10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작년 절반 수준"(7/2,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약 1천960만 달러(약 198억원)로 작년 상반기 3천559만 달러(약 359억원)에 비해 45% 감소했다고 VOA가 전함.

- "몽골 정유회사, 北 내륙서 유전탐사 준비"(7/2, 자유아시아방송(RFA))
 - 몽골의 정유회사 '에이치비오일'(HBOil)이 북한 내륙에서 유전을 탐사할 준비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에이치비오일은 지난 5월 평양 양각도호텔에 북한 원유 개발총회사와 합작사업 이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고 영국인 지질 전문가도 영입함.

- 중국 연변주 "北 근로자 도입 확대 가능성"(7/2, 연변일보)
 - 위샤오핑(于曉峰) 연변주 상무부주장은 1일 연변주 옌지(延吉)시를 방문한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가는 올해 연변주에 북한 노동자 도입허가증을 1천500개 발급했는데 연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3천 개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변일보가 2일 전함.
 - 부주장은 이어 "훈춘(琿春)시 취안허(琿河)통상구와 북한 나진항을 잇는 도로 물류는 양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탓에 투먼(圖們)시에서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개통하고 국가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연변의 화물을 나진항으로 직접 운송한 뒤 바다를 통해 중국 남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류 대사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연변과 북한의 대외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연변의 대외통로 건설과 북한 노동자 도입, 국경합작구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시장경제 배우자'는 北...학술지에 '증권' 소개(7/2, 정치법률연구)
 - 학술지 정치법률연구(2014년 2호·6월 14일 발행)는 2일 '증권 발행의 본질과 분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인 증권을 자세히 소개함.
 - 논문은 '국제 경제 교류를 위해 다른 국가의 경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침을 인용하며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벌이자면 이들 국가의 증권법이 규제한 증권 발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 창춘-평양 관광 전세기 운항 개시(7/2, 길림신문)**
 -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1일 운항을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이 2일 전함.
 - 신문에 의하면 창춘시 여유국(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전세기 취항으로 북한 관광에 필요한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창춘과 평양 사이에 문화, 관광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北, 러시아 관광객 유치 나서..."수요 다변화 목적"(7/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북한 국가관광총국의 김영일 선전국장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 여행객들의 최근 해외여행 동향을 분석하고 러시아 여행사와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러시아인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여전히 북한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 수는 적어 중국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 러시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美단체, 北에 온실식수 지원사업(7/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기독교계 대북지원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CFK)이 올여름 북한에서 온실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 CFK 측은 지난 2일 북한 여러 지역의 온실 30개에서 재배할 채소 씨앗을 지원했으며 시금치, 호박, 토마토, 취나물, 브로콜리 등의 채소 씨앗은 평양과 사리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지역에 전달됐다고 RFA가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의 천연생물활성제(유기물질 등 식물의 생장에 좋은 350여종 성분 함유) 새로 개발 및 고산과수농장 확장 공사 진척(총량의 80% 돌파) 선전(7.2, 중앙통신)
- 北, 산화철계 발파가스 중화제와 초음파 분사식 제진기를 동시 이용한 새로운 파가스 및 먼지제거기술을 개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7.3, 중앙통신)
- 北, 방사선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축광형발광재료'가 개발되었다고 보도(7.4, 중앙통신)
-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 잡지들은 지식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선전(7.4, 중앙통신)



- 올해 수산성의 상반기계획 122.4% 완수 등 수산부문 성과 선전(7.5, 중앙통신)
- 지난 10년간 5만여 정보의 수유나무림(기름작물) 조성 성과(수유기름, 식용뿐 아니라 고급 비누 등 공업원료로 이용) 선전(7.5, 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새 축구공 '최우수' 선전..."수입산 못지않아"(7/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축구 열기를 더해주는 '최우수' 상표의 축구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체육성 산하의 한 기관에서 새로 생산한 축구공을 소개함.
 - '최우수'라는 상표명에는 이 공으로 훈련을 해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평남서 고구려시대 소금생산 유적 발굴"(7/2,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고구려 시대 소금 생산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등 북한 연구진이 평안남도 온천군 원읍지구에서 유적을 발굴했다며 "새로 발굴된 유적은 고구려 시기의 바다소금 생산 유적이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소개함.
- **유엔 "北 홍역 발생 확인...요청시 지원 검토"(7/2,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홍역 발생 사실을 유엔 산하 세계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에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을 인용해 3일 전함.
 - 드 보노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수 건의 홍역 발생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확산 감시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힘.
- **英 정부, 북한 내 영어교육프로그램 2017년까지 연장(7/3,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3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영국 외교부는 북한 내 영어교육과 영어교원 강습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북한과 합의했고 현재 평양에 주재하는 강사 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여성 8명, 싱가포르서 국제경영 연수"(7/3, 조선 익스체인지)**
 - 조선 익스체인지는 3일 홈페이지에서 "북한 여성 경영인 8명이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 경영 분야에서의 여성 기업가 정신과 기업 혁신 등에 대해 연수를 받았다"고 밝힘.
 - 연수는 2주간 진행됐으며 국제 경영 규범과 다양한 경영 개념을 학습하고 여러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싱가포르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경영 체계를 배운 뒤 실제 어떤 소매업을 창업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기업 이미지(CI)와 상표를 분석하는 과제도 수행했다고 조선 익스체인지가 전함.

- **북한 칠보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7/3, 조선중앙통신)**
 - 북한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칠보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최근 유네스코 인간 및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제26차 회의에서는 조선의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였다"고 밝힘.

- **北 "일부 지역 가뭄 지속...농작물에 영향"(7/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의 일부 지방들에서 가뭄이 지속돼 농업부문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6월에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렸으나 황해남도과 황해북도, 남포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4~20mm 정도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기상통보에 의하면 앞으로 8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폭우와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지만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의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되는 가뭄로 올해 농사가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임.

- **北 김정은, 日 출신 100세 할머니에게 생일상(7/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일 평안남도 남포시에 사는 일본 출신 할머니에게 100세 생일상을 선물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기름부족 北 "나무에서 식용유 뽑자"(7/5,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5일 "조선에서 수유나무(쉬나무)림 조성에 힘을 넣고 있다"며 "각지 해당 기관들에서는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한 전망도와 지역별 분포 계획을 세운 데 기초해 조성사업을 군중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전함.

- **북한도 선행학습 '골치'... "어린이는 놀며 배워야"(7/6, 교육신문;연합뉴스)**
 - 북한 주간 '교육신문'(6월26일자)은 '유치원 교육을 소학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유치원들이 시행 중인 선행학습의 병폐를 지적하며 유치원생에게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방북 러시아 군악단, 평양에 이어 지방서도 공연(7.1, 노동신문)
 - 北, 70년 전 김일성 흑백사진 컬러로 재현 공개(7.3, 노동신문)
 - 보천보햇불상 체육경기대회 축구(남·여) 1급 2차 경기의 '경기력 향상' 등 성과 보도(7.2, 중앙통신)
 - 김일성 사망 20돌(7.8) 즈음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회고무대(태양의 품은 영원합니다), 7월 3일 여성회관에서 진행(7.3, 중앙통신·중앙방송)
 - 탄력망협회, 로라스케트협회, 로라휘거(피겨)협회, 로라호케이(하키)협회들이 올해 초 발족되었음을 보도(7.2, 조선신보)
 - 北 각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7.6, 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억류 미국인 2명 혐의 확정...기소 준비"(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해당 기관'이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24)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를 조사했다며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적대행위 혐의들에 근거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이들 미국인 2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적대행위 혐의가 증거 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정됐다"며 "조사 과정에서의 영사 접촉, 대우 등은 유관국 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일, 北미사일 발사에도 내일 국장급 협의(6/3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7월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지난 달 스웨덴에서 이룬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후속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뉴스에 따르면 북일 정부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 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북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 "지난 5월 말 조일(북일) 합의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 관방장관 "중일 외무국장급 협의 조정 중"(6/30, 교도통신)
 -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 간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 정부와도 국장급 협의를 갖느냐는 질문에 "현재 조정 중"이라고만 말했



다고 30일 교도통신이 전함.

-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정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에서는 쿵췌안여우(孔鉉右)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참석한 다고 통신은 보도함.

● **미국무부 "北역류 관광객 2명 인도적으로 석방해야"(7/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2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 달라고 30일(현지시간) 미국 쟈니슨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파울 씨와 밀러 씨의 가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들 두 관광객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적대행위 혐의들에 근거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北日, 오늘 국장급협의...납치조사제재해제 논의(7/1, 교도통신)**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서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함.
- 북한은 남북 일본인에 관해 전면 재조사를 시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일본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함.

● **北, 러시아와 전방위 유대 과시...中 '견제'하나(7/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를 넘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게 유대를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6월 25일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국방부 중앙군악단은 같은달 30일에는 강원도 원산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공연한 사실을 노동신문은 1일 이들의 원산 공연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함.

● **조선신보 "北日 합의, 동북아 냉전구도 청산 계기"(7/1, 노동신문)**

- 조선신보는 1일 '격동의 동북아시아, 북일 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베이징,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을 거쳐 발표된 정부 간 합의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허점을 뚫고 탈냉전의 새 질서를 확립하는 단서를 열어놓았다"며 "북일 정부 간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직격탄"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이면서도 북일 사이에는 국교가 없다"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 비정상적인 관계는 이제껏 청산되지 못한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함.



- 벨기에 NGO "北 올해도 '인도주의 위기' 주의 대상"(7/2, ACAPS)
 - 벨기에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 '주의 대상'으로 분류함.
 -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 1천600만여명이 만성 식량 부족 상태이며 이중 240만여명은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 비율이 극도로 높다"고 지적했으며 "작년 80만여명의 주민들이 수해를 피해를 보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 "일본, 대북제재 일부해제 4일 각의 결정"(7/2, 산케이신문)
 - 일본 정부는 3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 예정이며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인적왕래 규제, 송금·현금반출 규제, 인도적 선박 왕래 규제 등 3가지 독자 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전함.
 - 신문은 전날 4시간 반에 걸쳐 열린 북일 협의에서 일본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군이나 당 등 전 조직을 조사할 강한 권한을 지녔는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설명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해제를 고려 중인 제재의 내용에 관해 북한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北 대변해은 조선신보가 본 '동북아 외교전'(7/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북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북일 간 '스톡홀름 합의' 발표를 전후로 동북아에 질서재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동북아 외교전'을 분석함.
 - 조선신보는 북한이 동북아 질서의 재판짜기 중심에 있다면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기존의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대북정책도 엇갈리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는 입장을 내놓음.
- 중국, 北미사일 발사에 "정세완화 도움되는 일 하라"(7/2,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관련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무죄 판결 北 청천강호 선장, 주말 파나마 출국"(7/3, 미국의소리(VOA))
 - 청천강호 선장선원들을 변호하는 홀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들은 판결 내용을 아직 공식 통보받지 않아 구금돼 있으며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 내용이 모두 통보되는 4~5일째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北, 日 '고노담화 검증' 비난...수치를 알아야'(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일본의 수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3년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1995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거론, "과거 죄악에 대해 어느 정도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고 개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다행스러운 계기였다"고 평가함.
 - 신문은 그러나 일본이 최근 고노담화 검증 결과라는 것을 발표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서나 회피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며 "검증이요 뭐요 하는 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종당에는 고노담화를 부정하지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美 시비질해도 전술유도탄 계속 발사할 것"(7/3,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제아무리 시비질을 해대도 우리의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들은 못되게 놓고 있는 날강도무리들의 아성을 목표로 쉬임없이 기운차게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우리의 초정밀화된 여러 가지 화력타격수단들의 소멸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당당한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함.

- **日 대북제재 일부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7/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임.
 - 또한 아직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입항금지, 만경봉호 입항금지 등 일본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뉴스가 전함.

- **北, 납치문제 특별조사위 활동 개시...위원 명단 발표(7/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7월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사업에 동원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밝힘.



- **北** 신문 "공정한 국제질서 위해 반제 투쟁해야"(7/4, 노동신문)
 - 신문은 4일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진보적 인류의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류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日** 납치문제 해결에 '파격적' 의지 과시(7/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 측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인다"고 명시해 사실상 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또한 일본 측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에는 납치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일본 당국자의 방북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북한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駐北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을 위한 영화감상회, 7월 3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7.3,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 대표단·「총련」 일꾼 및 노간부 대표단·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대표단 등, 7월 5일 만수대 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7.5, 중앙통신)
- 김영남, 7월 6일 코모로 대통령에게 독립 39돌 즈음 축전(7.6, 중앙통신·중앙방송)
- 베트남 노동총연맹 대표단, 만경대를 방문하고 주체사상탑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인민대학습당 등을 참관(7.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에 대한 美국무성 부대변인 발언 관련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권리행사'라며 '앞으로도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며 로켓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더욱 발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7.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자위적 조치를 시비하지 말라)

나. 6자회담(북핵)

- **北**, 시진핑 방한 앞두고 "북핵포기는 망상" 주장(6/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북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괴뢰들이 북핵 포기라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며 "우리의 정책과 노선에 그 무슨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함.



- 이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과 괴뢰들의 핵 공갈과 위협, 북침전쟁 위험부터 제거돼야 한다"며 "침략적인 핵 공갈 정책이 전환되지 않고 북침전쟁 소동이 중지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외 일반)

- '북핵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긴장해지고 있다'는 국제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반박하며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이 떠돌고 있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7.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김기춘 실장 경질 또 주장..."재앙 근원 제거해야"(6/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재앙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통치위기 때마다 인사교체를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들었다며 "남조선에 '유신' 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의 파국과 대결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함.
 - 이어 김기춘 실장이 남한 정부에서 제왕 노릇을 하면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자신의 '끼나풀'들을 앉혔다며 "이 따위 정상배들 때문에 남조선 사회가 더욱 파쇼화되고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가 격화돼 민족의 운명이 농락당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요구(6/3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남북간 교류와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남한 정부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北, 시진핑 방한 하루전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발사(7/2, 연합뉴스)**
 -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루 전인 2일 오전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한이 지난달 26일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것을 오전 6시50분과 8시에 동해상으로 1발씩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사거리는 18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함.



- **조선신보 "北 '특별제안은 남북관계 개선 절호 기회'(7/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국방위 특별제안,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언급하며 "제안에 깃든 의도를 진지하게 고려함 없이 구태의연한 대결 자세를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함.
 - 조선신보는 남측의 태도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일본과 비교하며 "이는 남측이 낡은 질서에 얽매어 북남관계를 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北 "南은 의심만 하지 말고 화해의 손 맞잡아야"(7/3, 노동신문)**
 - 노동신문 3일 '단호한 결심, 우리 민족끼리 립장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남측에 대한 비난보다는 특별제안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며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주력함.
 - 신문은 "특별제안에는 어떻게 하나 꼬일대로 꼬인 불신과 대결의 매듭을 풀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려는 우리의 진심과 애국애족적인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며 "우리의 성의와 아량이 어린 특별제안은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강조함.

- **北, 74 공동성명 정신 강조하며 '특별제안' 부각(7/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5면 전면을 할애해 74 공동성명을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고 강조하며 3대 통일 원칙을 자세히 소개함.
 - 신문은 '조국통일의 근본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이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지향이고 한결같은 의지"라며 공동성명 정신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함.

- **北, 4일 상륙훈련 때 스파이크미사일 진지타격 포함(7/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북한이 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도서상륙훈련에는 백령·연평도에 배치한 스파이크 미사일 진지도 타격 목표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힘.
 - 뉴스는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 맞춰 동해안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훈련과 도서상륙훈련을 기획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훈련 장소를 동해로 선택한 것은 그나마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경기도 4년 만에 대북지원...산림병충해 방제약품 전달(7/5, 연합뉴스)

- 경기도는 5일 "오는 18일께 개성으로 방제약품을 운송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통일부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다음 주 중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포스팜 2만 8천800ℓ, 동력천공기 126대, 약제주입기 252개를 전달하고 솔나방과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용으로 클로르푸루아주론 유제 3천500ℓ, 연무소독기 35대, 확산제 5만 2천500ℓ를 지원하며, 방제지역은 경기도 옛 지역인 황해도와 평양 대성산, 묘향산, 금강산 일대 7천100ha에 달한다고 뉴스가 전함.

■ 기타 (대남)

- [北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30)]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온 겨레와 세계 앞에 보여주자'며 '7월 4일 0시부터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취소, 상호 비방 및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6.30, 중앙통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관련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하여 정부적 책임을 반성하며 흘린 박OO의 눈물이 완전히 거짓이고 기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심화되고 있는 통치력 마비와 위기사태는 반역패당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조소(6.30, 중앙통신)
- 北, 7월 7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성명 발표(7.7,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국전선」 중앙위 비망록(7.6), 김일성의 마지막 친필 20돌 즈음 '조국통일 성업에 쌓아올린 민족사적 대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김정은 영도 따라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선동(7.7,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류길재 "北, 핵 내려놓고 국제경제 체제 참여해야"(7/2,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일, 수출입은행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개발 국제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핵을 내려놓고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류 장관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핵 개발'이 가장 높은 장벽이지만 '신뢰의 부족 역시 또 하나의 장벽'이라며 "합의와 약속에 대한 빈번한 파기 등은 북한을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북한은 신뢰가 중요한 자본이란 점을 인식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미일 합참의장 첫 회의... "北 핵미사일위협 논의"(7/2, 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 수뇌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회의는 미국 합참의장이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음.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제재법 시행 예산 5년간 100억원 추산(7/1,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4 HR



1771)' 시행을 위해 5년간 약 1천만 달러(10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음.

- RFA가 인용한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비용추산 보고서'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2015년~2019년까지 대북 제재강화를 위해 10명의 전담 인원이 필요하며 이들 인건비로 매년 200만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음.
-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돈 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관리들의 '블랙리스트'와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北 미사일 발사, 시진핑 방한과 무관'(6/30,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우선' 방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관측에 대해 "내가 보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와 시 주석 방한과의 연관성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
- 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 주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또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 한국 안팎의 분석에 중국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 앞으로 북한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정기적인 분야별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한중, 중북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시진핑, 방북 먼저 하려다 北 비협조로 무산(중학자)(7/1, 연합뉴스)

- 중국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의 류밍(劉鳴) 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관례에 따라 북한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됐다는 주장을 했음.
- 중국은 방중을 위해 북한에 비핵화 문제에 대한 태도 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위협을 했으며, 이러한 동안 한중관계는 계속 진전했고 '북한을 기다릴 수 없어' 시 주석이 7월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 류 연구원의 설명임.
- 또한 북한이 지난달 30일 특별제안을 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이 주도자라는 점을 표명하기 위한 카드"라고 해석했으며,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고려'라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 설명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언론, 北미사일 발사 '한중 밀월' 견제로 해석(6/30, 연합뉴스)**
 - 아사히 신문은 30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의식한 시위로 해석했음.
 -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 위협에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연결 지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핵미사일 문제를 우선시하는 한미 양국과 일본의 공동보조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보도했음.
 - 한편으로는 일북 협의에서 일본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에 불만을 느끼고 이를 간접적으로 표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일본 정부는 "확실하게 항의"하겠지만 "예정대로 북한과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일본, "북한으로부터 납치조사위 구성 설명 들어"(7/1, 연합뉴스)**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일 베이징에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납치 특별조사위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정중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의 납치문제 조사 개시 시점에 이행하기로 한 대북 독자제재 일부 해제와 관련 "(북측) 설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사안에 입각해 정부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음.
 - 일본은 북한의 납치 특별조사위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직속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과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한 바 있음.

- **日 대북제재 일부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7/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으며, 해제된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임.
 - 하지만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입항금지, 만경호호 입항금지 등 일본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고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공조 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음.



마. 러북 관계

● 北, 러시아와 전방위 유대 과시...中 '견제'하나(7/1, 연합뉴스)

-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게 유대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음.
- 이는 올해가 김일성 주석의 구 소련 첫 공식 방문과 북한-러시아 경제문화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구도가 급변하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양상"이라며 "중북관계가 상대적으로 냉각 국면인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러시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시(7/2,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일(현지시간), "남북한 관계 정상화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최근)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 또한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반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를 초래할 여하한 행동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이러한 노력은 오는 8월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가디언'을 앞두고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와 지역 안보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제법적 메커니즘 창설의 중요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바. 기타

● 유엔 "북한과 무기화 가능 서비스 거래도 금지"(7/2, 연합뉴스)

-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브리핑을 열어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기거래 외에 모든 무기 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무기 관련 서비스는 기술지원, 보수수리 등이 해당하는데, 무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거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까지 포함되며,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대북 금수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Catch-All) 개념을 적용했음.
- 이와 함께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군사안보 관련 협



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북한과 여하한 형태의 무기 관련 거래를 금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지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 美와 멀어지고 中과 가까워지는 건 큰 실수일 수<FT>(6/30,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시진핑, 서울 방문으로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군이 아니라 미군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대신 미국과 멀어진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FT는 한국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 간 관계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한중 간 관계 개선이 북한을 다룰 때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임.
 - 또한 "중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다면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의 장기적 과제는 더욱 강력해지는 중국의 위성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나. 한중 관계

- **한국, 中주도 AIIB 참여 딜레마(6/30, 연합뉴스)(7/1,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중 재무장관 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의 한국 참여를 요청했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원 시스템에 미국이 탐탁지 않은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올랐음.
 - AIIB는 자본금 1천억 달러, ASEAN의 20개국 이상이 참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도통신은 이달 초 미 정부 관료가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관료에게 AIIB 참여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음.
 - 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정부는 AIIB에 대한 참여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 **추귀홍 중국대사 "한중은 공동운명, 함께 꿈 추구해야"(7/2,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방한을 "미래가 연계된 공동운명"(前途



相關, 命運爲共)"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국민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꿈을 추구해나가자"고 말했다.

- 추 대사는 중국 정부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한국 광복군 표지석' 설치와 한국 정부의 중국군 유해 송환을 예로 거론하며 한중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고 이는 한중 상호신뢰와 우호가 부단히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했음.
-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할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삼성이 70억 달러를 투자해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웠는데 이는 중국 개혁개방 이래 외국기업의 단일투자 규모로는 최대"라고 치켜세웠음.

● **차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 반대"(7/3, 연합뉴스)**

- 취임 후 5번째로 공식회동 한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으며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또한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음.
-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 6자회담 관련해서는, 관련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관련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두 정상은 합의했음.
- 청와대는 "작년 6월의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 있는' 대화 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음.

다. 한일 관계

● **외통위,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채택(6/30,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음.
- 결의안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스스



로 책임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며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음.

-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한일 어업협상 결렬...EEZ내 어선 자국으로 철수해야(6/30,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30일, 최근 개최한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014년 어기(2014.7.1~2015.6.30)'중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으며 7월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 "日 정책 중대변경...과거사 기인 우려 불식시켜야"(7/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것과 관련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음.
-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은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 한다"고 밝혔으며,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일본 외무성 "박 대통령의 고노담화 검증 비판 유감"(7/2,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의 사토 구니(佐藤地)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을 비판한데 대해 "고노담화를 훼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시했음.
- 사토 대변인은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검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검토 결과를 냉정하게 봐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음.

- 아베 내각은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검증팀을 꾸린 뒤 고노담화 검증을 진행해 한일 간에 문안 조정을 했다는 내용과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 경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음.

● 한국, 美의식해 한중 정상회담서 日비판자제(7/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인 대일 비판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을 한국 측이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음.
- 중국의 경우에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적인 중일관계의 악화를 피하겠다는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부연했음.
- 또한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한국은 안보상의 이점을 고려해 묵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대일 비판을 자제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라. 미중 관계

● 美中 내달 9일 전략경제대화…'북한문제' 논의 주목(7/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전략경제대화(S&ED)를 갖는다고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외교·안보 분야의 쟁점들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가 표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이버 해킹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의 문제에서 양국이 첨예한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추가도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등 북한 관련 사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음.
- 이번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汪洋) 부총리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며, 대화기간 중 제5차 미중 고위 인적교류회담(CPE)도 개최할 예정이라 알려졌다.

● 美 언론 "시진핑 방한, 동아시아 美동맹 약화 의도"(7/4, 연합뉴스)

- 미국 언론들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중국의 국가주석이 한국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시



바. 마러 관계

● 푸틴 "서방의 제재는 일방적 정책 수단이며 공갈"(7/1, 연합뉴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이해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와 같은 협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미국이 프랑스가 러시아와 체결한 '미스트랄' 상륙함 공급 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이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들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음.
- 푸틴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계획은 없다"면서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러시아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항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합법적 권리들은 자주 무시됐다"고 지적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화동(6/30,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30일, 7월1일로 예정된 일북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1시간여 회동했다고 보도했음.
- 두 사람은 최근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대일 압박을 계속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대화 채널 복원을 모색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앞서 지난 27일에는 류연둥(劉延東) 중국 부총리가 아베 내각의 각료인 공명당 소속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과 면담했는데,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각료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부총리급 인사와 회담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음.

● 중국, 일본에 "중국 주권안보 훼손 말아야" 비판(7/2,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대해 "지역의 평화 안정과 중국의 주권안보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웃국가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음.
- 그는 "일본 측에 집단 자위권 용인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중국은 이웃국가와의 공동발전, 공동안보를 실현하고 이익공동체에서 출발해 장기적으로 이웃국가와 화목하고 평안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음.



- 이어 중국이 최근 아시아 안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평화를 중시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으며, 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지낸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을 언급했음.

● 중국, 日 '대북제재 해제'에 "협상진전 주목"(7/3,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북이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의 이런 평가는 "쌍방이 상호 존중과 소통,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일북 납북자 협상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한 것이지만 최근 활발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일북 행보에는 내심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중국의 냉랭해진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다 중국과 대결구도에 있는 아베 정부가 일북 밀착 행보를 기반으로 대중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아. 중러 관계

● 러, 中에 달화성 공동탐사 등 우주 협력 제안(6/30,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린 '위성항법장치 분야 러-중 협력 원탁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중국에 달, 화성 탐사 등 우주개발에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음.
- 로고진 부총리는 "러시아는 중국 파트너들과 함께 유인우주선 개발 및 달과 화성 탐사 등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기술유출 등을 우려해 외국의 접근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우주분야 사업에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임.
- 근년 들어 유례없는 밀월을 과시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두 나라 간 우주 협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혐의 확정, 기소 준비 중'(6/30, 미국의 소리)**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의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해당기관이 이들을 조사한 결과 적대행위 혐의가 증거 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에 근거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사 접촉이나 대우 등은 유관국 법률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재판을 통해 혐의를 확정된 뒤 관영매체를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 정부 "북, 인도적 차원 미국인 석방해야"(6/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쟌 사키 대변인은 지난 30일 북한에 억류된 매튜 토드 밀러씨 등 세 명의 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음.
 -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밀러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Jeffrey Edward Fowle) 씨 등 두 명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말함.
 - 또한 미국은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파울 씨와 밀러 씨를 접촉했다고 밝힘.
 - 이들 억류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사실을 알려줄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 관광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경고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북 당국, 미신행위 확산으로 고심(6/30, 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지난 6월 26일 북한의 미신행위 실태를 소개하면서 미신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북한 주민들의 미신행위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이날 북한내부실상 정보설명회에서 NK지식인연대의 김홍광 대표는 '전사회적으로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나가자'는 제목의 북한 내 군중강연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음.
 - 김 대표는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미신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



별이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북한에서 미신행위는 더 깊숙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 북한 당국은 오래전부터 마약이나 매음(성매매)행위와 함께 미신행위를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보위부 관리들조차 무당과 점쟁이를 찾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움.
- 북한은 각박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술과 무속신앙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임.

● 북, 농작물 병해충 피해 확산(7/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북부 산간지대에서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때 이른 무더위와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등 고르지 못한 날씨 탓에 북한의 북부산간지대 협동농장들에서 농작물 병해충이 크게 번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제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견잡을 수 없는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강조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내륙지대는 가뭄이 심해서 난리인데 여기 양강도는 소나기가 너무 자주 내리고 있다"며 "땅이 습한데다 날씨도 더워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가 예년보다 일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현재 양강도에는 감자무당벌레가 기승을 부려 김매기에 동원된 주민들이 손으로 일일이 무당벌레를 잡는 방식으로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금이 감자무당벌레들이 알을 낳는 시기라서 당장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유충들이 성장하는 8월부터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올해는 이상하게 남새(채소)와 과일들에 진딧물이 많이 낀다"며 "도마도와 오이, 호박과 같은 남새류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 사정이 이런데도 병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살충제가 전혀 공급되지 않아 농장원들과 주민들은 소변을 발효시켜 남새에 뿌려 주거나 활엽수를 태운 재를 뿌려주는 식으로 진딧물들을 제거하고 있는 형편임.
- 살충제, 살충제가 있으면 농촌지원 없이도 병충해 방지가 가능하나, 소식통은 북한 농업당국이 "말로만 '과학농사'를 떠들 뿐 모든 농사일을 노력동원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병해충 구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를 감당키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 중 휴대전화 방해전파 한층 강화(7/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이 중국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국휴대폰 방해전파를 한층 강화함.
-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의 중국 손전화(휴대폰)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는데도 불법 사용자가 줄어들지 않자 중국 휴대폰 방해전파 발사 시간과 대상지역을 넓히고 있다고 함.



- 종전까지만 해도 국경도시의 시내에서만 방해전파로 통화가 불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시 외곽 지역까지 방해전파가 확대되어 도심에서 수십 킬로를 벗어나야 겨우 통화가 가능한 형편임.
-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현재는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에 가면 어렵게나마 중국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방해전파가 이런 속도로 확대된다면 머지않아 중국 휴대전화는 국경인근 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음.
- 한편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혹시 도청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용어사용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함.
-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중국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도청으로 통화내용이 그대로 녹음되는 바람에 변명 한마디 못 하고 혹독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전화통화 중 특정 이름, 지명 등을 거명하면 당구그이 도청 녹음장치가 자동작동 및 녹음되어 은어를 사용한다고 함.
- 중국에 주재하는 무역일꾼들도 중국 전화로 국경 지역의 지인들에 부탁해 평양 등 내부지역 사람들과 간접 통화를 해왔는데 이 같은 간접 소통마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북한 여성 경영인 8명 싱가포르 연수(7/2, 자유아시아방송)

- 싱가포르에 기반한 비정부기구 조선 익스체인지 (Chosun Exchange)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여성 경영인 8명이 싱가포르에서 국제 경영과 경제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고 전함.
- 이번 연수는 기업가 정신, 기업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음.
- 조선 익스체인지는 이번 싱가포르 연수의 여성 참가자 8명은 앞서 열린 평양에서의 경영 연수에서 우수한 성적과 태도를 보여 선발되었으며, 2주간 열린 이번 연수가 국제 경영 규범(international business norms)과 다양한 경영 개념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알아가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또한 최근 더 많은 북한 경영인들의 해외 연수를 주선하면서 북한 참가자들의 비자 발급문제나 북한 당국의 까다로운 해외여행 제한 및 규제 등으로 참가자들의 연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 이 기구의 자원 봉사자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정책학과의 테스몬드 씨는 '소매 시장 조사 프로젝트' (retail research project)라는 것을 기획해, 북한 참가자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의 다양한 상점들을 방문해보고, 가게들의 기본적인 경영 체계 등을 배우고 실제로 어떤 소매업을 꾸릴 수 있을 지 고안해 보는 현장 실습 과제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 북, 불법 사채업자들에 강력 경고(7/2, 자유아시아방송)

- 고리대업자들의 횡포에 의한 주민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북한 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섰으며,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합법적



으로 돈을 대출해 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희천시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을 계기로 북한 사법당국이 "앞으로 적발된 고리대업자들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것과 함께 최고 사형까지의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조치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중순, 희천시에서 귀국자 출신의 고리대업자가 깡패들을 동원해 채무자 가족들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 모두가 심하게 다쳤고 세대주는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 사망한 세대주는 '은하 로켓'의 추진체(엔진)를 비롯해 여러 가지 군수품을 만드는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중요한 기술자였고 이로 하여 사건은 중앙에 신속히 보고됐다고 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고리대업자들을 엄벌한다는 인민보안부의 경고조치가 최근 인민반회의를 통해 포치(하달)됐다"고 설명했다.
-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고리대업자들을 처벌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고리대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많으나 적으나 다 이자를 받게 마련인데 그들 모두를 고리대업자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고리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은행에서 이자를 좀 낮추어 돈을 빌려주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고 개인들의 피해도 덜 하지 않겠냐"는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함.

● 유엔 '북한 홍역 발생 확인, 지원 요청 시 검토'(7/3, 미국의 소리)

- 유엔 세계아동기금(UNICEF)는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수건의 홍역 발생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확산 감시체제에 돌입했다고 설명함.
- 또한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에 홍역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 유엔 '북한, 올해 식량 부족분 거의 확보 못해...식량부족 국가 재지정(7/4, 미국의 소리)

-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다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7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분의 7%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외부로부터



확보한 곡물은 2만5천2백t으로, 이는 올해 10월까지 부족한 곡물 34만 1백t의 7%에 불과한 규모임.

- 앞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WFP)는 지난 12월 발표한 작황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34만t으로 추정하고 북한 당국이 예년처럼 30만t 정도를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절대 부족량은 4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북한이 부족한 4만t을 추가 수입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음.
-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현재 북한이 확보한 전체 물량 중 수입은 1만 3천t, 외부 지원은 1만 2천2백t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 6월 현재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만 6천4백t에 비해 무려 95% 감소함.
-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올해도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으며, 북한의 식량체계가 여전히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 재배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2. 북한인권

● 南문단서 처음으로 '北인권 개선' 목소리 나와(7/2, 데일리NK)

- 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탈북 문학 세미나 및 남북 문인 시낭송회'에서 한국 문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 문학평론가인 방민호 서울대 교수는 '문학인 북한인권 선언' 발표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문학인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초안 작성 배경을 밝혔음.
- 그는 이어 "북한은 3대째 '빅 브라더'가 철권을 휘두르는 공포와 불신, 기아의 땅"이라며 "문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저(북한) 체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북녘의 동포들이 똑같이 누리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문학인들은 양심과 양식을 걸고 말하고 써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함.

● 미 기독교 단체 북한 종교자유 운동에 3만 명 이상 서명(7/2,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의 종교자유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 달 사이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함.
- 지난달 초 시작된 이 서명운동에 1일 현재 3만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음.
- 수신인이 김 제1위원장으로 돼 있는 이 서한에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투옥돼 고문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처형되고 있다며, 이런 실상을 자유세계에 알리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아울러 박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도 포함되어 있음.
- '순교자의 소리'는 서명운동을 마친 뒤 이 서한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3. 탈북자

- '北직파간첩' 홍씨 "합동신문센터 조사 위헌" 헌법소원(7/1, 연합뉴스)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조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 홍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이 홍씨를 상대로 행한 합동신문센터 강제조사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힘.
 - 홍씨 측은 "국정원 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며 "알몸 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 촬영,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함.
- 기독교 北인권단체, 中 탈북자 정책 비판 기자회견(7/2, 국민일보)
 - 기독교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탈북난민복송반대부산시민연합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일 한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기독교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 요청서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북한인권과 탈북난민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탈북자 11명, 중국 공안에 체포...北송 위기"(7/3, 데일리NK)
 - 탈북자 11명이 중국 모처에서 지난 6월 19일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됐다고 (사)북한민주화위원회가 밝혔음.
 - 위원회는 이날 중국 연지(延吉)시에서 8명, 투먼(圖門)시에서 3명의 탈북자들이 현재 북송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 중이었기에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美인권단체 "시진핑,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선언해야"(7/3,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DC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일 (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 방문을 계기로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음.
 - HRNK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정책을 바꿔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단체는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범죄로 규정한 야만적이고 반인도적인 처우를 받게 되며,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관리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함.
 - 한편 HRNK는 이날 공개한 새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을 비판하고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음.
 -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윈스턴 로드 HRNK 이사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한에서의 다양한 긴급 사태를 놓고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앨버타 코언 HRNK 공동위원장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는데, 탈북자 문제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해법을 모색할 '다자 이슈'라는 점을 중국이 인정하고 국제 난민 처우와 관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할 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日, 북일 회담 앞서 납북자 해결 촉구 집회 열려(6/30, 뉴스1)**
 - 일본인 납치피해자 관련 북일 정부 간 회담을 하루 앞 둔 가운데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일본에서 개최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납치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500여 일본인은 29일 후쿠오카 시내에서 집회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북일 정부간 회담에 대해 "마지막 협상이 될지도 모른다. 피해자 전원을 구출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에 호소했음.
 -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후루야 게이이치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이 이날 새벽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회담을 앞 둔 중요한 시기에 (북한이)도발해 오는 일은 이미 예상했다"면서 "북일 회담에서 철저히 규탄하겠다"고 밝혔음.



- 이어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모두를 되찾기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함.
- **일본 "북한으로부터 납치조사위 구성 설명들어"(7/1, 연합뉴스)**
 - 북한은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에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상황을 설명했다.
 - 교도통신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에서 (납치 특별조사위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정중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이하라 국장은 이 같은 북한의 설명 내용을 귀국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北-日, 메구미 딸 11월 방일 합의"(7/1, 동아일보)**
 -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横田惠) 씨의 딸 김은경 씨(26)가 올해 11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북한과 일본이 이미 합의했다는 증언이 제기됨.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0일 "일본 정부 소식통과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올해 3월 10~14일 요코타 씨의 부모가 몽골에서 외손녀인 은경 씨를 만나기 전 북-일 간에 이같이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북한은 은경 씨의 양국 간 자유 왕래를, 일본은 영구 귀국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은경 씨가 일본을 방문한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사실상 요코타 씨의 죽음을 인정하고 한발 물러서 북한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아베 총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하겠다"(7/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다, 전에 없는 태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 북한이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도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3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포함돼 있음.
- 또한 조사는 납치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2차대전 종전 이후 북한에 잔류한 일본인 및 북송된 재일 조선인의 일본인 배우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스가 장관은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북일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음.
- 교도통신은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일본 정부가 외무성, 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꾸려질 전문가팀을 북한에 파견, 조사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음.
-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두 자릿수의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으나,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음.

● 北 송일호 "北, 日 제재해제 상응하는 조치 발표"(7/3, 연합뉴스)

-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3일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키로 발표한 데 대해 "이미 합의됐던 것"이라며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송 대사는 지난 1일 베이징(北京)에서 북일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3일 귀국길에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힘.
- 송 대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오전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그것은 뭐 합의됐던 것이고 이제 돌아가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 정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우리 측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능과 구성체계 주요성원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조사형식과 방법 등에 대해서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함.
- 이어 "쌍방은 앞으로 차후 외교적으로 연계를 가지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조사위원회의 결과 통보에 걸릴 시간과 관련,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본 관방장관도 조사를 1년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유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자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이밖에 그는 특별조사위 위원장인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본 측에 다 통보했다"면서 "우리도 필요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음.



-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들 "아직 대북 제재 해제할 때 아냐"(7/3, 미국의 소리)**

 -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나타냈으나, 아직은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 지난 1980년 북한에 납치될 당시 26세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마쓰키 가오루 씨의 언니 사이토 후미요 씨, 987년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23세 때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 이치가와 겐이치 씨 등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기대감을 표명했음.
 - 이런 가운데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현 단계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나 1983년 당시 23세로 영국 유학 중 행방불명된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어머니 아리모토 가요토 씨는 북한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 왔으며,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양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실종자' 문제를 조사하는 민간단체 '특정실종자 문제 조사회의' 아라키 카즈히로 대표도 아직 제재를 해제할 때가 아니며, 모든 납북자들의 귀국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함.

- **美 "北日대화, 주변국 비핵화 노력 감안해 투명하게"(7/4,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북일 대화가 주변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감안해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쟈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일본이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해줄기로 한 것과 관련, 언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정례적 접촉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의 이해와 비핵화 노력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안보이해를 감안해 투명한 방식으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동맹 및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동정하며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 **"일본, 다음 달 북일 외무상 회담 추진"(7/4, 연합뉴스)**

 -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합의와 관련해 북한과의 외무상 회담을 이르면 다음 달 추진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지역 포럼(ARF) 각료회의에 맞춰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회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회담이 열리면 일본은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납북자 귀환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산케이신문은 또 북한에서 약 1주일 전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일본인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정보제공자와 접촉한 북한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日 대북제재 일부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7/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음.
-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임.
-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되게 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는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대상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되었음.
- 의료품 등을 싣는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으나 사람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천만 원) 초과 시'에서 '3천만 엔(약 3억 원) 초과 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약 100만 원)에서 100만 엔(약 1천만 원)으로 올라갔음.
- 북한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문제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일본 "북한과 핫라인 추진...납치조사 협의"(7/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한 대북 협의를 위해 북일간 전용회선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상호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일간에는 이미 양측 베이징 대사관 채널과 외무성 국장급 협의 등 소통 창구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납치문제 재조사에 특화된 상시협의 채널을 개설, 전화와 팩스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려는 것이 일본 측 구상이다.
- 산케이 신문은 5일 전용회선 설치 추진이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한 북일간 조율을 원활하게 만드는 동시에 북한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감시하려는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 또 일본 정부는 4일 활동을 시작한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



등을 점검할 팀을 이르면 북한의 1차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 **아베 "9월 개각 때 안보법제 담당 각료 신설"(7/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음.
- 그는 또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래 빈번한 인사교체를 포함, 계속해서 체제기반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음.
- 특히 아베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납치 문제의 해결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강조함.
- 그는 "이 방침 아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즉시 귀국, 진상규명과 실행범 인도를 요구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그들이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 협상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절반 가까이 감소(7/2, 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 차원의 인도주의 지원은 1일 현재 약 1,9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59만 달러에 비해 44% 감소함.
- 지원국 수도 지난해 10개 나라에서 6개 나라로 줄었는데, 지난해 지원을 했던 캐나다와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올해도 지원을 계속으며, 지난해 지원을 하지 않았던 한국이 26만 달러를 지원했음.
- 지난해 북한에 지원을 제공했던 호주와 러시아,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올해 상반기 현재 지원을 하지 않음.
- 개별 국가로는 스위스가 382만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액수를 지원했으며,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에게 분유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스위스의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1만 달러에 비해 57% 감소했음.
- 이어 스웨덴이 347만 달러를 지원했고,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각각 359



만 달러와 1백만 달러로 뒤를 이음.

- 올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량과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65%인 1,281만 달러가 사용되었고, 보건 사업에 332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08만 달러가 각각 지원됨.

● 스웨덴 "올해 580만 달러 대북지원"(7/2, 자유아시아방송)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14년 대북인도주의 지원개요서(Humanitarian Fact Sheet 2014)'에서 390만 스위스 크로나, 즉 미화 582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올해 집행 중인 지원금 582만 달러 중 87%에 해당하는 약 507만 달러가 2014년 대북지원 예산으로 새로 편성됐고, 나머지 13%인 75만 달러는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됐음.
- 스웨덴 정부는 유엔의 구호기구나 국제비정부지원단체 등 9개 단체(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유엔 국제아동기금, 세이브 더 칠드런, 프리미어 위장스, 컨선 월드와이드,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핸디캡 인터내셔널,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 정부, 북한 내 영어교육 프로그램 3년 연장(7/3, 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교육과 영어교원 강습 프로그램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2일 발표함.
- 영국 외교부는 현재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4 명의 강사가 북한의 영어교사들에게 강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북한의 2개 대학과 2개 중학교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학교가 대학교 7곳, 중학교 3곳으로 늘어날 것임.
-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영국 외교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자료 개발, 영어교사 강습 등이 포함돼 있음.
-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내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외국인을 접하면서 영국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임.
- 영국 정부는 핵 개발과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도,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비판적 교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인도지원 협의 방북 승인(7/3, 뉴시스)

-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북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방북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힘.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관계자 3명은 4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 별일 예정임.



- **CFK, 북한 서 온실 식수 개선 사업(7/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에 기반한 비정부기구 대북 의료지원 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은 온실 사업과 식수 개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힘.
 - 이 기구는 지난 2일 평양을 비롯해 황해남북도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온실 30개 지역에 시금치, 호박, 토마토, 취나물, 브로콜리 같은 과일과 야채 씨앗들을 배달함.
 - 또한 식수 개선 사업도 진행 중으로, 양동이 모양의 정수기, 그리고 다른 식수 사업을 위한 물품들을 지난 주 배달을 위해 선적했다고 전함.
 - 이 기구는 또 올 가을에는 북한의 병원 두 곳에 수도 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사리원과 황해남도의 병원 두 곳에 태양열판과 물 저장탱크, 태양열 펌프, 수도관 등 수도 시설을 설치해 환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경기도 4년만에 대북지원...산림병충해 방제약품 전달(7/5, 연합뉴스)**
 - 경기도가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해 병충해 방제약품을 지원함.
 - 도는 5일 "오는 18일께 개성으로 방제약품을 운송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통일부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다음 주 중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고 밝힘.
 -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포스팜 2만 8천800ℓ, 동력천공기 126대, 약제주입기 252개를 전달하고 솔나방과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용으로 클로르푸루아주론 유제 3천500ℓ, 연무소독기 35대, 확산제 5만 2천500ℓ를 지원하며, 이는 25t 트럭 7대 분이고 액수로는 5억원 규모임.
 - 방제지역은 경기도 옛 지역인 황해도와 평양 대성산, 묘향산, 금강산 일대 7천100ha에 달함.
 - 도는 앞서 북한산림녹화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단체 겨레의 숲과 실무회의를 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 합의했으며, 물자 전달에 방제 전문가가 동행할 예정이며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방제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8. 북한동향

- 미국의 파키스탄·예멘 등 무인기 공습과 민간인 피해 및 외국 정상들도 청 등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하며 미국의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재판관 행세' 배경(6.29, 평양방송/과연 이것이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인가)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